



미국 : AFL-CIO 위원장 리처드 트럼카 심장마비로 별세

미국 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의 위원장 리처드 트럼카(Richard Trumka)가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부고를 접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지도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¹⁾²⁾

그는 펜실베이니아 남서부의 탄광촌에서 자랐고, 대학 및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 광부 생활을 했다. 1982년 33세의 나이로 미국 광산노조연합(UMWA)의 최연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건장한 체격과 두터운 수염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많은 조합원이 버락 오바마에 대해 회의론을 표했으나, 그는 직접 현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안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줄곧 지지를 표해 온 점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민주당과 아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사후 트럼카 시절의 2인자이자 AFL-CIO의 사무총장인 리즈 쉐러(Liz Shuler)가 노조 위원장직을 이어받게 되었다. AFL-CIO의 대변인 팀 쉐리트너(Tim Schlittner)에 따르면, 쉐러는 오랫동안 트럼카와 팀을 이루며 노조의 미래에 대한 뜻을 공유했다.³⁾ 뿐만 아니라 쉐러가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AFL-CIO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쉐러는 현재 트럼카의 남은 10개월의 임기를 채우도록 예정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쉐러가 미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인가?”이다. AFL-CIO는 트럼카의 재임기간 동안 「단결권 보호법안(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의 통과와 같은 정치적 이슈, 즉 “워싱턴 정치”에 주로 포커스를 두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 일부는 현재 미국의 낮은 노조 조직률을 두고 보았을 때, 조직화를 통한 조합원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쉐러가 트럼카의 시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임무를 맡을 적임자인지, 마찬가지로 그의 존재가 과연 청년 노동자의 가입을 추동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⁴⁾

이에 따라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은 미 항공승무원 노조(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CWA : AFA) 위원장인 사라 넬슨(Sara Nelson)이다. 그는 AFL-CIO의 이른바 진보파를 구성하고 있으며, 노조가 조직화와 지역 단위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는 다른 진보적 풀뿌리 운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넬슨은 트럼카의 재임기간 동안 노조의 다양한 입장에 거리를 두어왔으며, 트럼카의 별세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1) Swasey, B. and D. Gonyea(2021), “Powerful U.S. Labor Leader Richard Trumka Dies”, *NPR*, August 5,



<https://www.npr.org> (검색일 : 2021.8.21).

2) Davis, W.(2021), “Liz Shuler Becomes The 1st Woman To Lead The AFL-CIO”, *NPR*, August 21, <https://www.npr.org> (검색일 : 2021.8.21).

3) Mueller, E.(2021), “‘It’s a Huge Day’: AFL-CIO Names Shuler as First Female President”, *Politico*, August 20, <https://www.politico.com/news/2021/08/20/afl-cio-liz-shuler-president-506391?cid=apn> (검색일 : 2021.8.22).

4) Rainey, R.(2021), “Trumka Era Ends, and Union Tactics May Be in for a Makeover”, *Politico*, August 19, <https://www.politico.com> (검색일 : 2021.8.22).

미국 : 뉴욕 주정부의 무탄소 전력망 정책에 대한 노조와 전력회사의 동맹

뉴욕 주정부의 무탄소 전력망을 향한 행보에 대하여 미국 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와 건설 노조들을 비롯한 다수의 노조연맹과 전력회사 연맹이 반기를 들고 있다.¹⁾ 이들은 현재의 가이드 라인하에서 2040년까지 무탄소 전력망을 구성한다는 주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뉴욕 전력공급업체협회(IPPNY) 회장인 개빈 도노휴(Gavin Donohue)에 따르면, “우리는 전력공급을 위해 24시간 상시 이용가능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면 구름이 있거나 바람이 없는 특정 시간대에는 전력을 생산하지 못

한다.”라고 주장했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소발전이나 청정가스, 심지어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클린에너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수소 전력에 관하여 회의적인 입장인데,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전력생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Karlin, R.(2021), “Power Generators, Unions Want New York State to Look at More Green Options”, *Times Union*, August 19, <https://www.timesunion.com> (검색일 : 2021.8.21).

미국 : 노조 가입에 따른 소매업 임금격차 확대

2021년 7월에 발표된 로이터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

우 노동조합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아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조합

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3년 이동평균 데이터를 사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과 2019년 사이에 소매업에 종사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평균 주급 차이는 20달러에서 5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소매업 노동자는 주당 평균 약 730달러(약 84만 원)를 받았다. 반면 비노조 노동자는 주당 약 670달러(약 78만 원)를 받았다. 보고서는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이유로 다른 여러 요인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누리는 더 큰 직업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및 낮은 이직률을 들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에서 관측되는 전반적인 노

조조직화 운동이 소매업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5년 동안 총 5,804건에 해당하는 전체 공공 및 민간 노동조합 선거 중 72%가 노조화에 찬성했으며 작년에는 10건 중 9건이 노조화에 성공하였다. 해당 성공률은 지난 10년 간 50%가 약간 넘는 노조화 성공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소매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노동자의 단 4.6%만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이는 1980년대 초반의 9% 노조 가입률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앞으로 소매업의 노조화 움직임에 변동이 있을지 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¹⁾

1) Naidu, R.(2021), "Retail Workers in Unions Reap Higher Wages even as U.S. Organizers Suffer Setbacks", *Reuters*, July 9,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1.8.11).

미국 : 빅 이코노미 기업들, 노동자와의 계약관계에 관한 매사추세츠주 주민발의안 제출

2021년 8월 4일, 차량공유 기업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그리고 음식 및 식료품 배달업체인 도어대시(DoorDash)와 인스타카트(Instacart)는 자사와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가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갖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을 매사추세츠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하고 관련 신청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신청이 통과될 경우 이 주민발의안은 2022년 11월에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데, 이 주민발의안은 주법에 따라 차량 공유 및 배달 관련 운전자를 임금노동자 자격에서 제외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2(Proposition

22)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주민발의안은 해당 운전자에게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도록 하지만 이들을 매사추세츠 법에 따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도록 하기 때문에, 차량공유 기업이나 배달업체 등 소위 빅 이코노미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간외 노동수당 및 법정 기업복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주는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소위 "ABC 테스트"¹⁾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Maura Healy) 법무장관은 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인 운전자를 오



분류하고 불법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법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 기업들은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의 이러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은 보장하되 독

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다.²⁾ 이와 같이 각 이코노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 노동자가 사업자의 통제하에 있는가, 사업자의 사업 흐름에 맞춰 노동을 하는가, 노동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계약되는 것이 통상적인가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지위 여부를 판단한다.
- 2) Platoff, E.(2021), "With Ballot Question, Tech Companies Could Put the Future of the Gig Economy in Voters' Hands", *The Boston Globe*, August 2, <https://www.bostonglobe.com/> (검색일: 2021.8.11).

미국 :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아마존 노조 대표권 승인 재투표 권고

지난 2~3월에 진행된 아마존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 투표와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투표에서 반대표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노동조합 대표권 승인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청문관(hearing officer)이 이 선거 결과를 기각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¹⁾ 이에 대해 향후 수주 동안 NLRB의 지역사무소장(regional director)이 검토할 예정이며, 사용자 측은 그 결과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NLRB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윌머 립먼(Wilma B. Liebman)은 통상적으로 지역사무소장은 청문관의 권고를 수용해 왔다고 말하며, 향후 분쟁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당시 아마존 노조 대표권 승인을 주도한 소매·도매·백화점노동조합(RWDSU)은 이 권고를 통해 아마존이 투표 과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협박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간 RWDSU는 사용자 측이 노조를 지지하지 않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회유하는 한편, 노동자의 투표 행위를 감시하기에 용이하도록 투표함을 설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NLRB가 투표 결과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좌절되었던 아마존 노조 대표권 승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물론 압도적인 투표 결과를 감안하면 재투표를 한다 해도 승인에 성공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1) Scheiber, N.(2021), "Labor Board Official Backs Union Challenge on Amazon Vote", *The New York Times*, August 2, <https://www.nytimes.com> (검색일: 2021.8.15).

미국 : 온난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 제기

참여과학자연합(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 UC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야외 노동자가 위험 수준의 고온에 노출되는 일수는 21세기 중반까지 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84명의 노동자가 고온 노출로 인해 사망했고 3년 평균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학자 레이첼 리커(Rachel Licker)는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 노동자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3,200만 명가량의 야외 노동자가 건강과 일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인한 작업 중단 일수가 늘어나면서 야외 노동자가 매년 평균 1,700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 타격도 있을 것이라 보았는데, 매년 손실임금이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NPR 기사에 따르면, 특히 유색인종 노동자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 노동자의 40% 이상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며 특히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가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연방 차원의 노동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업무시간을 더 시원한 시간대로 조정하고 전체 업무량을 줄이는 것, 사용자의 의무적인 안전계획 수립, 고온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화, 빠른 대응을 위한 다국어 교육 등을 제시했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나타나듯 이미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Mcdaniel, E.(2021), "Outdoor Workers Could Face Far More Dangerous Heat by 2065 Because of Climate Change", NPR, August 17, <https://www.npr.org> (검색일 : 2021.8.19).

독일 : 정부의 해외 취득 직업관련 자격증 인정 사례, 2020년에 전년대비 약 5% 증가

독일 정부는 해외에서 취득한 직업관련 자격증을 독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격과 동일한 내용의 독일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전환 신청건수는 약 5만 9천 건(2019년 5만 7,300 건)이었으며, 총 4만 4,800건이 독일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2019년)의 4만 2,500건보다



약 5%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신규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신규 신청건수는 4만 3,100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4만 2천 건으로 약 3%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건수 대비 승인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2020년 3월 1일에 발효된 전문인력 이민법¹⁾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숙련 노동자의 독일 이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법률 패키지인데, 여기에는 해외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증이 독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해외 이주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인력 이민법이 해외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증의 전환 신청건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신청건수에 비해 전환 승인건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 법률로 인해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독일 내 전환이 더욱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자격증에 대한 전환 승인이 이루어진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전환 승인건수가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2만 9,900건). 의료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전환 승인건수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분야 전

환 승인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24%, 2018년에는 27%, 2017년에는 19% 증가한 바 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와 같은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전환 승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전 직종의 전환 승인 사례 중 의료 및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 수준에 달하였다(2019년 2만 7,700건, 약 65%).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에 전환 승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직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간호직이었다(2020년 1만 5,500건, 2019년 1만 5,500건). 의사직의 경우 7,600건(2019년 7,400건)으로 간호직 다음으로 많은 승인건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큰 격차를 두고 엔지니어(2020년 2,500건, 2019년 2,800건)와 교사(2020년 2,100건, 2019년 2,000건)가 그다음에 자리하고 있다.

2020년에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대해 전환 승인이 이루어졌다. 개별 국가별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600건), 세르비아(3,400건), 시리아(3,100건)에서 발급된 자격증의 전환 신청에 대한 승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EU(1만 1,400건), 기타 유럽 국가(1만 6,500건), 아시아(1만 1,300건) 지역 출신의 자격증 전환 신청에 대한 승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²⁾

1)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2)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2021), "Ausländische Berufsabschlüsse : 5% mehr Anerkennungen im Jahr 2020", 24 August,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 2021.8.25).

독일 : 코로나19, 보조적 직무 담당 직업군의 고용에 큰 영향 미쳐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하고 덜 복잡한 활동을 하는 보조적 직무 담당 직업군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봄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한 고용침체를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IAB)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보조적 직무 담당 직업군의 고용은 전체 직업군의 고용회복 속도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봉쇄조치는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적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군의 경우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직무내용에 기초하여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들 직업군에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노인 돌봄도우미 등과 같이 별도의 개별적 직무내용을 가지는 직업도 포함되고, 주방보조, 창고노동자, 지게차 운전자 등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형태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도 포함된다.

이들 보조적 직무 담당 직업군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 초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고용확대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15년 3

월에서 2020년 3월 사이에 약 10.2% 증가하며 3,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에 보조적 직무 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15.6% 증가한 약 510만 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계절적 영향으로 요식업, 숙박업 등의 분야에서는 봄철에 보조적 직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임시직 포함)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보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가 고용에 미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규제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산업의 보조적 직무 분야에서도 고용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회복 속도는 전체 고용의 회복 속도보다 빨랐다. 이러한 보조적 직무 담당 직업군의 고용은 전체 고용 수준에 비해 약 2개월 정도 빨리 예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한편 보조적 직무내용을 가진 직업 중에서도 간병인, 노인 돌봄도우미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우편 및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조적 직업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¹⁾

1) IAB institut(2021), "Die Covid-19-Pandemie traf Helferberufe besonders stark", August 24, <https://www.iab.de> (검색일 : 2021.8.25).



영국 : 식품제조업체 및 음식점,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소자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브렉시트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에 처한 영국의 식품제조업체 및 음식점 등이 재소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영국은 재소자의 사회 적응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해서 기한부 석방제도를 통해 일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사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2021년 3월에 기한부 석방제도를 통해 일한 재소자들의 노동일수는 총 58,752일에 달했다.¹⁾²⁾

재소자 혹은 전과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한 교도소로부터 최근 급격한 구인수요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일

할 수 있는 재소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 육류공급협회(AIMP)는 재소자 및 전과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영국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성 재소자들의 고용을 돕는 자선단체인 워킹찬스(Working Chance)는 지난 2달간 사업체의 구인 문의가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육류가공협회(BMPS)의 대표 닉 앨런(Nick Allen)은 사업체들이 재소자나 퇴역군인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자선단체에 연락하거나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소셜미디어에 구인광고를 내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1) Eccles L. and S. Chambers(2021), "Shops, Farms and Restaurants Turns to Prisons to Fill Staff Shortages", *The Times*, August 21, <https://www.thetimes.co.uk> (검색일 : 2021.8.22).
- 2) Wood Z.(2021), "UK Food Firms Beg Ministers to Let Them Use Prisoners to Ease Labour Shortages", *The Guardian*, August 23,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8.23).

영국 : 정부, EU 출신 대형트럭 운전기사 고용을 위해 비자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거절

최근 대형트럭 운전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운송업계 등이 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¹⁾

영국물류협회(Logistics UK)와 영국소매업협회

(British Retail Consortium)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크와시 쿠르텡(Kwasi Kwarteng)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약 9만여 명의 대형트럭 운전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 서한에 따르면 중간 규모의 한 운송업체는 기존 운

전기사를 유지하는 데만 150만 파운드(약 22.5억 원)를 투자했으며, 한 소매업자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230만 파운드(약 34.5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위의 두 협회는 팬데믹 및 브렉시트로 인해 약 2만 5천여 명의 EU 출신 운전기사들이 자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규정의 일시적 완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영국인들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중단과 국경 통제 강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

고, 사용자들이 이민자에게 의존하는 대신 국내 노동자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국 정부도 내국인 운전기사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또한 대형트럭 운전기사들이 근무시간을 약간 연장할 수 있도록 최근 정부가 관련 규정을 일부 완화한 바 있으며, 위의 두 협회에 따르면 450여 개의 사업체가 규정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

1) Parker G. and S. Pfeifer(2021), "UK Rejects Industry Plea for Visas for EU Truck Drivers", *Financial Times*, August 22, <https://www.ft.com> (검색일 : 2021.8.24).

영국 : 유나이티트(Unite)의 차기 위원장 후보자, 노동자의 재택근무 요구 권리 주장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티트(Unite)의 신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 후보가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¹⁾ 온건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는 제러드 코인(Gerard Coyne)은 지난 2017년에도 유나이티트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간발의 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2021년 8월 선거에 재출마한 그는 노동조합이 20세기의 노동 관념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는 운동을 지향해야 하며, 이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편될 노동현장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재택근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재택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재택근무 요구를 거절하기 이전에 왜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코인은 재택근무가 노동자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해 주고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등²⁾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동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성과보다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 자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영국의 기업문화를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Shipman, T.(2021), "I'll Fight for Right to Work from Home, Says Unite Candidate Gerard Coyne", *The Times*, August 8, <https://www.thetimes.co.uk> (검색일 : 2021.8.24).
- 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Coronavirus and Attitudes to the Future of Homeworking",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8.24).

영국 : 잉글랜드, 국민건강서비스(NHS) 대기자 수 54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최근 잉글랜드에서는 국민건강서비스(NHS)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일반 진료 대기자 수가 2021년 6월 기준 545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잉글랜드 NHS 보건당국이 관련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7년 8월 이후 사상 최고치에 해당한다.¹⁾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자 명단에 포함된 545만 명의 환자 중에 170만 명은 NHS의 목표 대기시간인 1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30만 4,803명은 치료를 위해 1년 이상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보건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던 이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서 당분간 NHS 병원 치료 대기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비드 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잠재적인 NHS 이용자 수는 7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전면 해제된 현재 잠재적 이용자의 절반만 병원을 방문한다고 하여도 NHS의 인력 부족 및 업무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1) BBC(2021), "NHS Waiting List in England Hits Record 5.45 Million", *BBC*, August 12,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1.8.25).

프랑스 :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된 후에도 재택근무 지속

프랑스 정부는 2021년 6월 9일부로 재택근무 시행 원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¹⁾ 오히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노동자에게는 더 이상

자가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자의 범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7월에는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근무규칙을 변경하며 재택근무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재택근무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월 29일 프랑스 통계청(INSEE) 산하 조사연구통계지원국(Dares)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6월에 하루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한 노동자는 24%로 이는 지난 5월보다 겨우 2%p 감소한 것이다. 지난 5월 재택근무자 중 매일 재택근무자 비율은 31%(전체 노동자의 8%)였으나 6월에는 18%(전체 노동자의 4%)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면적인 사무실 근무로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

자는 5월 8%에서 6월 9%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에 주 2~4일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5월 48%에서 6월 57%로 증가했다.

Dares의 통계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보건위기 이후에 새로운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0%의 기업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39%는 의사 없음, 31%는 불확실).

1) De Comarmond, L.(2021), "Un quart des salariés ont continué à télétravailler à la sortie du confinement", *Les Echos*, 30 juil,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8.23).

프랑스 : 실업률, 코로나19 보건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프랑스 통계청(INSEE)이 2021년 8월 13일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이 위기 이전 상황으로 복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봉쇄조치가 시행된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던 프랑스의 실업률(마요트를 제외)은 2분기에 1분기 대비 0.1%p 하락하며, 2019년 말 수준인 8%를 기록했다. INSEE의 실뱅 라리유(Sylvain Larrieu)는 "1차 봉쇄조치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의 봉쇄조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말에 도입된 청년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제공 프

로그램(1 jeune 1 solution)을 통한 15~24세의 실업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청년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8%p, 2019년말 대비 1.4%p 하락하여 19.8%를 기록했다. 15~29세 니트(NEET) 비율은 12.8%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0.3%p 감소했지만 2019년 말에 비하면 여전히 0.5%p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 또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인 66.9% (+0.1%p)로 코로나19 보건위기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 정규직 고용률은 1분기와 비교하면 정체되어 있으나 50.2%를 기록하며 2019년 4분기 고용률보다 0.3%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¹⁾

1) Ruello, A.(2021), "Le chômage retombe à son niveau d'avant crise", *Les Echos*, 13 août,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8.23).



일본 : 코로나19 관련 고용조정조성금 지급액 4조 엔을 넘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을 보조하고 노동자의 해고를 막기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고용조정 조성금¹⁾의 지급액이 4조 엔을 넘었다. 2021년 7월 26일 후생노동성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이뤄진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결정이 약 400만 건이며, 지급결정액이 4조 124억 엔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1년도의 지급액을 약 1조 3천억 엔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액은 이를 훨씬 뛰어넘었으며, 이러한 지급이 지속된다면

올해 지급액은 5억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²⁾

이러한 고용조정조성금의 지출 확대에 의해 후생노동성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³⁾ 고용조정조성금의 일부를 고용보험료에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모두 고용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적립금이 많이 줄어들어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1) 고용조정조성금(雇用調整助成金)이란 기업의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 2) 山本恭介(2021), 「支給決定が4兆円突破 コロナ特例の雇調金、1年半で」, 朝日新聞, 7月26日, <https://www.asahi.com/> (검색일: 2021.8.23).
- 3) 山本恭介(2021), 「雇用保険料、来年度は2倍の可能性 コロナで積立金払底」, 朝日新聞, 8月11日, <https://www.asahi.com/> (검색일: 2021.8.23).

일본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27.8%에 그쳐

후생노동성은 2021년 7월 28일 유기계약 노동자가 5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전환 룰(無期転換ルール)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기전환 룰이란 노동자가 같은 기업에서 유기계약직으로 5년을 초과해 일한 후 고용계약을 갱신할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무기전환을 신청하면 기업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번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권리가 발생한 노동자 중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한 이는 27.8%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천 명 이상 기업에서는 39.9%였으나, 5~29인 기업에서는 8.6%에 그쳤다.¹⁾

한편 “앞으로 무기전환을 희망한다”고 답한 노동자는 18.9%였으며,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는 22.6%,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53.6%였다. 무기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고용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답이 약 80%였다. 희망하지 않는 이 유로는 “고령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 불만이 없어서”, “계약기간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무기전환 룰에 대해서 유기고용 노

동자의 38.5%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혀 모른다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도 39.9%였다.²⁾ 후생노동성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日本經濟新聞(2021), 「有期雇用の‘無期転換’, 権利行使は3割どまり 厚労省」, 日本經濟新聞, 7月28日, <https://www.nikkei.com/> (검색일: 2021.8.23).
- 2) 内藤尚志(2021), 「5年ルールで無期雇用に転換、対象者の3割 厚労省調査」, 朝日新聞, 7月28日, <https://www.asahi.com/> (검색일: 2021.8.23).

중국 :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 발표

중국에서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따른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운전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여전히 명확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새로운 업태에 종사하는 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7월 16일에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시장감독총국 등 7개 정부 부처와 전국총공회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¹⁾

지침은 총 네 가지 영역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역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① 플랫폼 기업(이하 ‘기업’)이 법규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고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② 노동관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업은 반드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관계 성립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이 노동자와 서면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한다. ③ 기업이 노무과건 등을 이용할 경우 합법적인 조건을 갖춘 파견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파견업체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기업이 외주 등 기타 고용 방식을 이용할 경우,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기업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영역은 노동자 권익보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④ 노동자를 채용할 때 성별, 민족, 연령 등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보증금 등의 형식으로 노동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도 안 되며, 노동자가 복수의 플랫폼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공제를 금지한다. 노동관계 성립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는 법적 임금제도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⑥ 플랫폼 노동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과학적으로 계측해 규정한다. ⑦ 국가 노동



안전보건 보호기준을 개선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노동안전을 보장한다. ⑧ 비정규 노동자가 재직지역에서 기초연금보험과 기초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적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관계 성립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는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해야 한다. ⑨ 정부와 사회의 역할, 정보화의 특징을 결합해 산재보호관리서비스 규범과 운영시스템을 확립한다. ⑩ 노동자의 플랫폼 접속 및 퇴장, 주문 배분, 건당 단가, 보수, 노동시간, 상벌제도 등에 대해 기업이 명확하게 제도화하도록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공회나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시하도록 한다.

셋째 영역은 노동자 권익보장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⑪ 노동자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에 도움이 되도록 특정 업종에 대한 기본정보, 급여, 인건비, 세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⑫ 새로운 고용형태에 적합한 사회보험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⑬ 플

랫폼 노동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모델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⑭ 플랫폼 노동자의 밀집 주거지구 혹은 업무지구에 임시 휴게소, 주차장, 화장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한다. ⑮ 플랫폼 노동자의 자녀가 거주지역에서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영역은 노동자 권익보장 업무시스템의 개선이다. ⑯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는 노동자 권익 관련 사항을 디지털 경제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²⁾에 통합하고 플랫폼 기업의 고용보고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동 상벌제도를 개선한다. ⑰ 공회는 플랫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⑱ 각급 법원과 노동쟁의중재기구는 노동쟁의 사건 처리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고용 사실에 근거해 노동관계를 판단한다. ⑲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1)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21),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交通运输部 应急部 市场监管总局 国家医保局 最高人民法院 全国总工会关于维护新就业形态劳动者劳动保障权益的指导意见」, 7月16日,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2021.8.19).

2)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 재산권 문제, 소비자 권리 보호, 디지털 경제 종사자의 노동권,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의미한다.

중국 : 베이징 신세대 농민공의 최근 현황

중국 국가통계국은 베이징시 농민공의 일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시 전체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조

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8월 16일 「2020년 베이징시 신세대 농민공 모

니터링 보고」를 발표했다. “신세대 농민공”은 1980년 이후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출생지와 다른 지역, 즉 도시에서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16세 이상의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2010년 중국 국무원에서 처음 제기한 정부 공식 개념이다.

이번 조사 결과 2020년 베이징시의 전체 농민공 중 신세대 농민공은 50.1%를 차지했고, 신세대 농민공 중 남성은 66.3%, 여성은 32.5%를 차지했다. 남성은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신세대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31.4세로 전년대비 0.4세 증가했고, 그 중 1990년대생의 월평균 소득은 6,424위안으로 전체 신세대 농민공의 평균 소득보다 210위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대 농민공은 주로 노동밀집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대민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축업, 도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순으로 67.2%가 이 업종에 종사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7.9%로 증가했고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만 571위안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베이징시의 신세대 농민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 지

출이 감소했다. 지출 중 의식주에 대한 소비가 총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개인주택을 임대해 생활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주요 여가 활동으로는 인터넷 접속, 휴식, 친구와의 만남 순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인터넷 접속이 60.1%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세대 농민공은 이전 세대의 농민공과는 달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으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서 직업에 대한 기대나 물질적, 정신적 요구 수준도 더 높다. 신세대 농민공 중 대졸 이상은 21.2%였는데, 그중 학부 졸업생은 20%, 대학원 졸업생은 1.2%였다.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이전 세대와는 달리 IT 산업 등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누린다.¹⁾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농촌 호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도시의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결국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에 융합되지 못하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도시와 농촌 사이를 방황하는 집단이 되었다.²⁾

1) 이번 보고가 발표된 후 중국에서는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IT 산업과 같이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민공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농민공이라는 개념은 직군이 아닌 호적지역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2)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21), 「2020年北京市外来新生代农民工监测报告发布」, 8月16日,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2021.8.19); 新浪财经(2021), 「官方认证“新生代农民工”, 码农扎心了」, 8月17日, <https://t.cj.sina.com.cn/> (검색일: 2021.8.19); 光明网(2021), 「“新生代农民工”为何有人诧异」, 8月18日, <https://m.gmw.cn/> (검색일: 2021.8.19); 李桂杰(2021), 「2020年北京市外来新生代农民工



监测报告显示: 从事信息传输业等行业新生代农民工占比大幅提高, 中国青年报, 8月16日, <http://news.cyol.com/> (검색일: 2021.8.19).

브라질 : 노동부 폐지 2년 6개월 만에 재가동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오닉스 로렌조니(Onyx Lorenzini)를 고용·사회보장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고용·사회보장부는 1930년대 제툴리우 바르가스 정부 때 설립되었던 노동부의 새 이름으로, 2019년 1월 이후 폐지되었다가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이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지율 하락과 탄핵 요구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국 운영에 쇄신을 기하고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정책 및 노사관계 재편을 담당할 장관

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장관은 약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과 노사관계 현대화를 위한 노조 시스템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취임 이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오닉스 로렌조니 장관은 영세 기업 지원 서비스협회인 세브라에(Sebrae)를 방문해 앞으로 1,500만 개의 마이크로개인사업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250만 명에 이르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새로운 법적 모델인 디지털 마이크로사업자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²⁾

- 1) Resende T.(2021), “Onyx quer acelerar mudanças em legislação trabalhista para economia digital”, *FOLHA DE S. PAULO*, July 28, <https://www1.folha.uol.com.br/> (검색일: 2021.8.14); Isaac de Oliveira(2021), “O que aconteceu ao trabalhador em 2,5 anos sem o Ministério do Trabalho?”, *UOL*, July 27, <https://economia.uol.com.br/> (검색일: 2021.8.14).
- 2) Doca G. and C. Almeida(2021), “Aplicativos terão seu próprio MEI: governo quer exigir contribuição de motoristas e entregadores”, *O GLOBO*, August 14, <https://oglobo.globo.com/> (검색일: 2021.8.14).

브라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시조치 법안 하원 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포함된 임시조치 법안(MP n° 1.045/2021)이 8월 12일 브라질 하원에서 찬

성 304표, 반대 133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초과노동수당 축소 등 노동법 조항 개정과 18~29세

청년 및 55세 이상 장년층 실업자에게 비정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나 장학금, 교통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9월 9일까지 상원에서 논의되며,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임시조치는 고용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실시한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을 연장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티노 아우레오(Christino Áureo) 연방 하원의원이 자발적 사회서비스 국가프로그램, 특별 인센티브 및 생산적 포용 제도, 최고고용기회 및 재진입 프로그램 등 청장년층의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발의하면

서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시조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연구소의 페르난도 바르보사(Fernando Barbosa) 연구원은 임시조치가 높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불완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자격 프로그램이다.”라고 옹호했다. 반면 상파울루대학 길레르미 펠리시아(Guilherme Feliciano) 교수는 “노동기본

<표 1> 임시조치 n° 1.045 법안 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요

	자발적 사회 서비스 국가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Serviço Social Voluntário)	특별 인센티브 및 생산적 포용 제도 (Regime Especial de Trabalho Incentivado, Qualificação e Inclusão Produtiva: Requip)	최초 고용기회 및 재진입 프로그램 (Programa Primeira Oportunidade e Reinserção no Emprego) Priore
목적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대상	청년(18~29세), 50세 이상	청년(18~29세), 2년 이상 실업자, 연방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	청년(18~29세), 1년 이상 실업자 중 55세 이상
노동권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부분 적용(공휴일, 연말 상여금, 연장노동수당, 퇴직금 차등 적용)
사회보장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일부 차등 적용
노동시간 및 급여	월 48시간(일 6시간, 주 3일 이내), 월 240해알 및 교통수당	주당 22시간, 월 550해알 (정부 50%+기업 50% 부담) 및 교통수당	월 최대 2,200해알 및 최대 275해알 보너스(정부 지급)
계약 기간	18개월	3년	36개월 (그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
기타	지자체 일자리 및 자격과정 이수 포함		총 직원의 25% 이내로 고용, 연간 최소 180시간 교육과정 제공

자료 : DIESSE(2021), “Câmara aprova substitutivo à Medida Provisória n° 1.045 e aprofunda precarização”, <https://www.dieese.org.br/notatecnica/2021/notaTec262MP1045Minirreformatrabalhista.pdf> (검색일 : 2021.8.17). 필자 재구성.



권을 부정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 노동권 및 사회보장 권리가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반

박했다. 노동계도 길레르미 교수와 비슷한 입장으로, 임시조치는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동권과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된 불안정 고용을 창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¹⁾

1) UOL(2021), “Nova reforma trabalhista é ‘escravidão’ e precariza vagas, dizem sindicatos”, August 11, <https://economia.uol.com.br/> (검색일: 2021.8.17); DIESSE(2021), “Câmara aprova substitutivo à Medida Provisória n° 1.045 e aprofunda precarização”, <https://www.dieese.org.br/notatecnica/2021/notaTec262MP1045Minirreformatrabalhista.pdf> (검색일: 2021.8.17).